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터전 조성한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사태 예방 위해 사방사업 추진… 지난해 대비 62% 증가된 306억원 예산 투입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306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80개소, 계류보조 21㏊, 산지사방 10㏊, 산림유역관리 4개소 등 사방시설을 신규 조성한다.

지난해 사방사업 예산 189억 원 대비 62%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겠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생활권 연접 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이다.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한다(사진은 사방댐(에코필라) 모습.)

실례로 지난 2020년 여름 전북도의 기록적인 폭우에도 사방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시설의 탁월한 효과를 입증

한 바 있다.
도는 여름철 장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도심지역·주민생활권 등 산사

태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타당성 평가, 동의서 모집,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사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추진해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조치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안전성 확보 및 시설물 관리에도 민첩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영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철 장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인력교육 등 현장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재해 없는 사방사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 빛낸 우수한 청소년 찾아요"

'전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 모집

전북도가 제9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비른 성장에 쾌감이 되는 자를 포상·격려함으로써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발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35명(효행 3명, 선행 8명, 멘학 8명, 예체능 8명, 국제화 4명, 장애 부문 4명)의 도내 청소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자는 효행·선행·면학·예·체능·국제화·장애 등 총 6개 부문에 각 1명씩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오는 5월 전북도 청소년어울림미당 행사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청소년상의 자격요건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장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3년 이내 기간 동안 관련 공적이 있는 자다.

추천기관은 시장·군수 및 각급 학교장, 대학 총장, 전북도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다.

후보자 신청은 4월 4일부터 11일 까지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도를 빛낸 우수한 청소년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양성빈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만들 것"



장수군수 선거에 나선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양부위원장)이 지난 21일에 이어 '농업·농촌 지원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두 번째 농업 공약의 주 내용으로 ▲농산물 저작가격 보장제 전 품목으로 확대, ▲유통 전문 공동사업단 운영 확대, ▲직거래 활성화, ▲찾아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확대, ▲농번기 아이들봄 운영시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양 부위원장은 "농업인이 걱정

없이 향상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구상을 풀어놨다"며 "주 공약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담레풀 제공과 크라우드 펀딩 등이다"고 밝혔다.

이어, '나디어 지원 센터를 설립해 장수군 내 농업인 개개인의 브랜드화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빈 부위원장은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야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수군수의 첫 번째 과제이다"며 "이를 위해 소득 안정부터 복지까지 모든 분야를 세심히 돋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365 쉼센터' 조성"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식공간인 '365 쉼센터' 조성 공약을 내놨다.

우범기 후보는 23일 전문현답(전주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2탄으로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365 쉼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택시기사는 정해진 운행 노선이나 종점 개념 없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운행하고 있음에도 휴식은 고사하고 생리현상조차 해결할 휴게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시에는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 설치된 플랫폼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으나 운수종사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으나 운수종사자에 비해 쉼터가 덜 없어 부족해 쉼터 확충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쉼센터 관리는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어르신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365 쉼센터'는 운수종사자들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냉난방기, 음수대,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타 지역체의 택시쉼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후보는 택시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인애 택시감자, 심어ッシ 5시간 할증제, 지자체 투자액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택시업계의 경영 활성화는 물론 근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23일 고군산군도를 찾아 '어촌뉴딜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했다.

'어촌뉴딜사업' 현장점검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군산군도 찾아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23일 고군산군도를 찾아 '어촌뉴딜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을 중 300곳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22개소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녀2구 어촌뉴딜 사업(2019~2021년)은 149억6천만 원을 투입해 방파제·연장·어구보관 및 공동작업장, 어항시설정비 등 10개 내역사업이 추진 중으로 4월에 준공 예정이다.

명도족 어촌뉴딜 사업(2019~2021년)은 명도와 방죽도에 91억6900만 원을

투입해 어구·어망창고, 여객선 대기실, 삶문화센터, 어업인쉼터 리모델링 등 15개 내역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5월에 준공 예정이다.

도는 군산시로부터 어촌뉴딜 사업의 추진상황과 준공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사업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나해수 국장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이돈승 "인구 5만명 읍 육성으로 시 승격 기반 마련"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인구 5만명 읍(邑) 육성을 통해 시(市) 승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 예비후보는 23일 "봉동읍과 삼례읍 중,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으로 인구 5만명의 읍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0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항은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는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전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창업 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23일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살아가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지역의 현실은 취업할 만한 기업이 없어 안타깝다며 청년들이 이 좌절하지 않도록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삶을 바라보는 '청년자치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자치기구는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제도를 연구하고 제언함과 동시에 선 후배 간의 연대, 동종업계 간의 연대,

새로운 판로와의 관계 등을 통해 서로 도와가며 기업을 이끌어 하는 모임체 성격이라는 것. 그는 이 기구가 뿐만 아니라 내년 전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들이 양성되면서 청년 창업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전주시의 비어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일정의 청업 교육 경험 프로그램 공유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공동체로 활동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청년 결혼 등 위한 대출금 이자지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전주시장 출마예정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23일 '청년 보듬정책' 5단계를 발표하고, 전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전액 지원하는 행정복원(law)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결혼과 출산에는 목돈이 필요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수백에 없다"며 "대출 이자 지원은 예비·신혼부부와 출산을 앞둔 가정에 가장 현실적이고 든든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부부와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결혼행복론'을 지원, 결혼 및 주거 등에 필요한 대출금 3,000만원까지만 이자 전액을 3년간 대신 내준다. 이를 출산한 가정은 '출생행복론'을 통해 이자 걱정 없이 3년간 2,000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결혼행복론을 지원받다가 이를 출산하면 출생행복론으로 전환해 추가로 2,000만원을 이자 부담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결혼행복론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3%(월 7만5,000원)로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1쌍이 받는 이자혜택은 3년간 총 270만원으로 추산된다. 출생행복론은 조건으로 적용하면 이하 한 명이 3년간 지원받는 총액은 180만 원에 이른다. 2019년 기준 전주의 혼인 건수가 2,828쌍, 신생아 수가 3,502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결혼·출생행복론 지원 규모는 각각 27억원, 24억 원이다.

임 전 군수는 "인생에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순간인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인 이유로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34년간의 행정 경험으로 지역발전 이룰 것"

박기봉 임실군수 예비후보

박기봉(67)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임실군수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박 예비후보는 23일 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34년간의 지방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낙후 임실, 소멸위기상황의 임실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임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로 9년째 생활현장에서 삼시세판의 도전정신을 불태워 농업인이 잘 사는 농축산인의 성공시대를 열겠다"며 "특히 공정성,

계 빙안에 관한 사항, 치안상황 분석 및 자치경찰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시책 발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자치경찰의 조정 역할, 지역주민과 안전·예방을 위해 통합시스템 개발, 아동에 대한 예방 청소년법 등"을 제안하며 "새 정부 정책과제로 체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현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 발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